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대선이 끝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지만 그 파장은 여전하다. 국민 절반은 환호하고 나머지 절반은 절망했다. 지지층의 결집 속에 개표 막판까지 피 말리는 초박빙 접전이 펼쳐진 탓이다. 여야 정치권은 성별·세대·갈라치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혐오와 분열을 부추겼다. 서로를 적대시하다 보니 그야말로 '전쟁 같은 선거'가 치러졌다. 신구 권력 간 가파른 대치는 선거 이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는 그날의 치열했던 전황(?)이 생생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 4815표(48.56%)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47.83%)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는 역대 대선 후보들 중 1·2위에 해당한다. 표차는 불과 24만 7077표(0.73%)로 직선제 이후 사상 최소였다. 무승부에 가까운 간발(間鬚)의 차이였지만 모든 것은 '승자 독식'이었다.

민주 쏠림, 국민의힘도 역대 최고

개표 과정을 어느 지역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본 사람들은 호남 유권자들이었음 것이다. 광주 81.5%, 전남 81.1%, 전북 80.6% 등 전국 1-3위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84.82%, 전남 86.10%, 전북에서 82.98%를 득표했다. 압도적 지지였다. 반면 서울과 영남 등 열 개 시도에서는 윤 후보에 뒤져 호남 표심의 결집은 빛이 바랬다. 그 결과 호남이 또다시 '정치적 섬'이 되는 것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과거에는 당선인에 대한 환호와 기대감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윤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폐지이다. 여성가족부의 탄생 목적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육아에 관한 정책을 모아서 보다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호하고 가족 단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체하고 각 부처의 일개 단위별로 업무를 쪼개어 분산시켜 버리면 과연 가족 단위

기고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지난 주말 '집콕'하면서 '서바이벌 패밀리'라는 영화를 시청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갑자기 끊어진 전기로 일상생활이 단절된 도시로부터 식량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였다.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족들의 이야기로 전체를 거리는 단순한 편이다. 일단은 전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영화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전기가 끊어져 모든 것이 멈춘 선도시에서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거기에서 최고급 외제차도, 값비싼 명품 시계도 아무 소용없다. 식량은 바로 인간의 기

호남 또다시 '정치적 섬'이 되는가

아니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남은 그동안 줄곧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해 왔다. 그 대가는 차별과 소외, 낙후였다. 보수 정권은 노골적이었고 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호남은 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까. 일부에선 배타적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호남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호남 후보를 제쳐두고 영남 출신인 노무현-문재인-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연에 얽매인 '몰치 마' 선택은 아니라는 얘기가.

호남 민심의 지지는 아무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것일 게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체화된 정의·인권·평화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선거 결과가 종종 자신의 뜻과 다르게 귀결되어도 의연한 이유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보수 정당은 호남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 마음을 졸 만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에서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통렬한 반성이나 혁신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지도부 총사퇴 이후 당내 분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질서 있는 전열 정비'를 택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그것이다. 한데 입으로는 반성과 분골쇄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정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통령도 반성해야 한다"는 쓴소리에 발끈하고 나설 정도다. 0.73% 차이의 패배를 '절절짜' (절지만 잘 싸웠다)라며 자위하려다 '지정못'(지고도 정신 못 차렸다)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절막 당사'나 '삼보일배'의 비장함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되어도 172석의 슈퍼 정당 아니냐는 오만마저 앞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단일 대오가 아니라 백기 쟁명이다. 성역 없는 난상공론으로 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한 징비록(懲誌錄)을 새기고 과감한 혁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안에는 기득권을 해체할 정치 개혁과 인적 쇄신, 민생 회복 등 환골탈태 방안이 담겨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쇄신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

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대선 통계에 담긴 호남 민심에는 변화의 조짐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에서 12.72%, 전남 11.44%, 전북에서 14.42%의 표를 얻어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수도 44만 6869표에 달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광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인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38.8%, 대학가와 가까운 서남동1투표소에서 30.3%를 얻었고, 고흥·영광·광양의 일부 투표소에서도 37~58%를 기록했다. 보수 정당 후보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던 호남 민심이 틈을 보이며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고립·소외 없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우려스럽다. 인수위원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전문·실무 위원도 소수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 등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한데 호남은 인수위와 연결 고리가 약해 자칫 역대 보수 정권의 호남 소외가 되풀이되는 것이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지역 유권자 230만 가구에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했다. 그 안에는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고자 한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호남에서 저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과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이제 윤 당선인이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국민의 힘이 호남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면 대선 과정의 약속부터 국정 과제에 반영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민주당과 적극 경쟁하면서 민심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레아 호남도 고립에서 벗어나 정치 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

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출산율을 매년 낮아진다. OECD 국가 중에 맨 하위이고 결혼에 대한 의지와 출산 계획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젊은이들은 출산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집을 얻기도 어렵고,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고, 출산을 해도 최소 3년 가까이 재취업이 어렵고 육아 기간 이후에는 출산 이전에 가졌던 수준의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사교육비 등에 허덕이면서 부모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는 현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청년들의 외면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탄생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교 문제 특히 지역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산업 생산과 국내 소비의 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인구가 최소한 1억 명 정도는 되어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데 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더 떨어진다 보면 지금 현재의 국내총생산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인구가 감소할 기미가 보이자 한 자

녀 정책을 포기한 것을 보면 인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칫 5년의 실수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싹을 수 없는 오류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다음으로는 북한 문제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북 평화 정책 덕분에 최소한 지난 5년 동안은 북한 때문에 국내 정치나 경제가 휘둘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하고 말았다. 앞으로 심각한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사적 공격으로 폐허가 되는 도시를 보았다. 당장의 고통도 있지만 언제가 전쟁이 끝나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복구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우리는 이미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는데 만약 그러한 충돌이 또 발생하면 어찌될 것인가?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도 우위이고 군사력도 우위 이기에 두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도 살펴보면 어느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고 전장이 되는 지역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에게 간절하게 바란다. 충돌이나 공격이라는 단어는 결코 입에 올리지 말고 대화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식량 안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식' (食)의 문제가 더욱 그렇다. 만약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도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량 안보란 국가가 인구 증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잉 생산으로 쌀이 남아는데 무슨 식량 안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사실 우리나라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쌀 자급률은 97.3%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 주요 곡물의 경우 밀 1.2%, 옥수수 3.3%, 콩 25.4%, 보리쌀 32.6%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세계 29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이제는

언제라도 수입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은 금물인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수급 대란이나 요소수 품절 사태 등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와 물류 중단, 방역 강화 등 글로벌 식량 공급 체계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즉 '총성 없는 식량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식량 민족주의' 기조가 일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 경제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 환경 보전, 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등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지금 맞닥뜨린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민주 '공천 혁신' 비리 단체장·기득권 배제부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 30% 공천'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쇄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 간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때문에 '기득권 세력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은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준수하고 여성과 청년의 표심에 화답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여성에게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 공천에 대한 내부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형편이다. 공약·기초의원 공천에서 청년·여성 할당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다.

특히 기초단체장 경선은 이미 대결 구도가 형성돼 무리하게 혁신 공천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어약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지방위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은 시도당에서 관리하는 만큼 중앙당이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청년 공천 역시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관리위원의 의사가 50~100%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위원을 관리하는 지역위원장이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 표심에 화답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여성에게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 공천에 대한 내부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형편이다. 공약·기초의원 공천에서 청년·여성 할당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려면 중앙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 공천에 나서야 한다. 우선 뇌물 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및 예비 후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경선 구조를 깨기 위해 시민 공천 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 무관용' 규제 강화로 끝나선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7일만이다.

대책의 골자는 무관용 원칙 대응과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이다. 우선 지자체에 위임돼 있던 부실시공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정부로 바뀌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세 명 사망, 또는 근로자 다섯 명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병행한다.

또한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 시공사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리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시공 품질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인

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발주자에게 결정 공사 기간 및 공사 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등 시공사·감리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 서울시에 광주시 서구 등 관할 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1970년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규모 참사를 잇따라 겪어 왔다.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를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업계는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국정 이양 시기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실이자 관저를 넘어 당대의 정치 권력과 시대정신 등이 구현된 역사적 장소다. 또한 백악관과 엘리제궁이 각각 미국과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실이 청와대로 불린 것은 제2대 윤보선 대통령 때였다. 최후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 최후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 최후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

사관으로 인해 10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처럼 청와대는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외교의 중심 공간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치적 장소였던 청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 청와대 이전은 대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 청사로,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경호와 안전, 비용,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는 청와대 이전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

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뜻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때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한데 갑작스럽게 용산 이전을 고집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전 반대 58.1%, 찬성 33.1%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변경'에 공복아 먹듯이 이전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국장

청와대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